

김영록 지사 “재생에너지·블루카본, 동북아 탄소중립 선도”

전남도 ‘2050 전남형 탄소중립 비전’ 제시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서 협력·연대 모색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제무대에서 ‘2050 전남형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선도 모델로서 전남의 역할을 강조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전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33회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을 주제로 전남의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는 전남도·부산시·경남도·제주도와 일본의 나가사키·후

쿠오카·아마구치·사가현 등 8개 시·도·현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1992년부터 중단 없이 이어져 온 대표적 국제 교류의 장이다. 올해 회의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공동 의제로 한·일 지방정부 간 협력과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2050 전남도 탄소중립 비전’을 소개하며, 전남이 국가의 기후정책 전환을 선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녹색성장 모델을 실현 중임을 강

조했다.

그는 △2026년부터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시행 △산업 저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에너지대전환 선도 △블루카본·그린카본 등 탄소흡수원 확대 △녹색생활 실천 문화 분위기 확산 등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탄소중립 실현은 각국의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한일해협 지역이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연대한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재생에너지, 수소, 블루카본 등 지역의 강점을 살려 동북아 탄소중립 실현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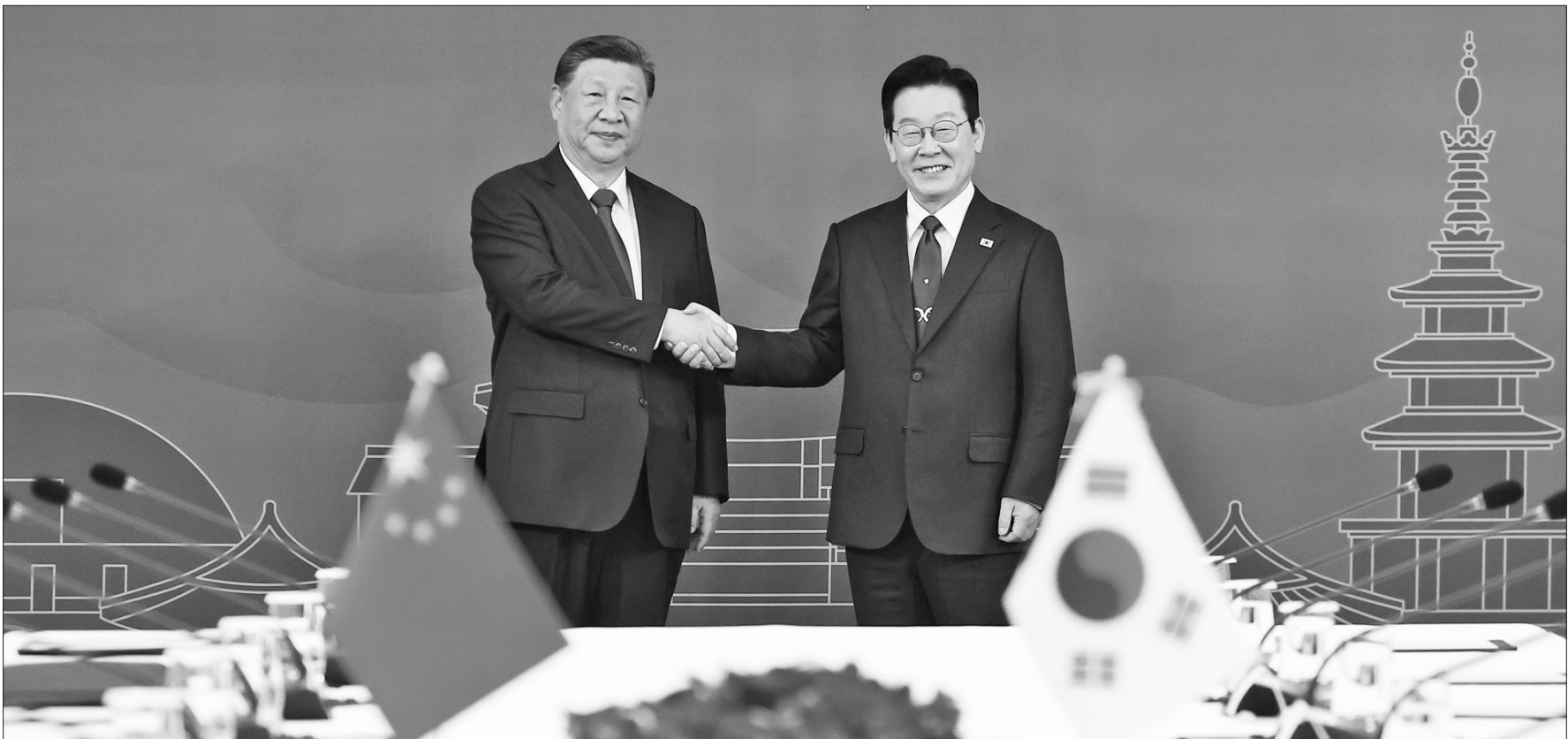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방정부와의 기후정책·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와 해양생태를 활용한 한·일 공동 탄소흡수 프로젝트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블루카본(연안 습지와 해조류를

통한 탄소흡수)과 그린카본(산림 흡수) 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탄소중립 협력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8개 시도현지사들은 공동선언문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행사의 대한민국(여수) 유치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70조 규모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서비스 무역·초국가 스캠범죄 대응 등 MOU도

한중정상회담…“민생분야 협력 구체화 위한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으로 열린 한중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며서 한중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데 중국이 반발하면서 틀어졌던 한중관계가 9년만에 복원을 위한 본 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로 보인다.

당시 한국은 북핵 위협 대응 차원에서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를 국내 배치하기로 했는데 중국은 사드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반발에 이른바 ‘한한령’으로 불

리는 한중 교류 제한 조치 등 여러 제재에 나섰다.

시 주석은 2014년 한국을 찾았고 사드 사태 이후로는 발길을 끊었다가 11년 만에 이번에 다시 방한했는데, 국가 간 교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정상직 방문이 ‘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상징적 장면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역시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미대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중국은 북핵문제 책임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으며 북미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던터라 큰 기대를 하기

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 회담을 비롯해 최근 중국은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다. 위 실장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과거 내세우던 한반도 비핵화, 즉 한국도 북한도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다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데, 기존의 ‘북핵 불용’ 입장을 내려놓은 것인지, 당장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한 것인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당장 답이 나오기 어려운 북핵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오는 데 힘을 쏟는 대신 양측이 쉽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민생, 즉 경제 분야에서의 관계를 복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날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과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분야별 양해각서(MOU)를 맺고 양국간 협력 강화 의지를 구체화했다.

양국은 이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이재

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양해각서와 계약서 총 7건에 서명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중앙은행 총 7년 만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각각의 MOU와,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중국 수출 식물 검역요건 MOU’도 맺었다.

양국 경찰 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했다.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에도 서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 전남도당위원장에 김원이 의원

“공정한 공천·도당 단합으로 지방선거 승리 견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임 도당 위원장에 김원이국회의원(목포시·사천)이 선출됐다.

전남도당은 2일 나주 종합스포츠타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제2차 임시당원대회를 열고 김원이 의원을 신임 도당 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대의원,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도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이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된 관리당원 투표와 2일 진행된 전국 대의원 투표를 거쳐 찬성 86.44%를 득표하며 새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확정됐다.

김원이 신임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서민 중심 정책을 실현해는 전남도당의 전통을 계승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후 지방선거압승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투병하고 공정한 공천을 이루겠다”며 “전남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도당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RE100 국가산단 유치, 전남 국립의대 설립, 2차전지·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첨단소재·우주항공산업 중심의 산업 개편 등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21·22대 국회의원으로, 서울특별시 정부부시장을 거쳐 현재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 선정

4년 집념의 결실…통과 시 2031년까지 1697억 투입

전남도가 4년간 공들인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국가 해양생태 거점 조성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전남도는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은 2026년 말까지 예타를 마친 뒤 통과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697억원을 투입, 보성과 순천 일대에 해양 생물 보전과 생태·관광 기능을 이루는 대규모 국가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 중앙부처와 협의하며 계획의 구체성과 경제성을 보완해왔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 복원, 지역 상생효과 등을 논

리적으로 제시하며 정부를 설득해왔다.

도는 이번 성과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서식지 파괴, 수산자원 고갈, 어촌 인구 감소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사업 대상지인 보성·순천 일대 여자만 갯벌(59.85㎢)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으로, 국내 최대 염습지를 품고 있다. 이곳은 흑두루미, 붉은발발롱개 등 멸종위기 생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수백 년간 지역민이 바다와 공존해온 생태·문화적 보고로 꼽힌다.

김영록 도지사는 “여자만은 대한민국 생태의 심장으로서 이번 예타 대상 선정은 전남도민의 헌신이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정부, 순천시, 보성군과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예타를 통과시켜 국가 해양생태공원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야, 728조 내년 예산안 5일부터 ‘격돌’

이재명표 사업·확장재정 쟁쟁…시내 내 처리 주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번주부터 시작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은 물론 확장 재정을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각 상임위마다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각 분야의 정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라는 정부 사업 기조를 최대한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정상화하고, 국립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 방향과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4조 원을 야당의 삭감 요구에 맞서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

안 만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삭감을 버르는 지역화폐 등의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삭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이번 예산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포퓰리즘적 지출을 최대한 막아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비롯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들에 심사를 버리고 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대미 투자 약속(35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대

해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해당 투자에 국민연금 등 공적금이 동원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금출처·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부터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해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정가 일각에서는 여야 대치가 가팔라서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전남과 통합’서 계속

이는 주민 다수가 단계적 확대 전략에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점진적·단계적인 경로 설계 등을 통한 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광역연합’에 대한 인식 수준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9.9%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해 정책에 대한 인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알고 있음’(5.9%)과 ‘어느 정도 알고 있음’(14.9%)을 합친 핵심 인지 층은 20.8%에 불과했다. 따라서 향후 정책 홍보 및 지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

계기관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평한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였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광역연합이 지역 상생과 공동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시·도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정책연구원 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7p)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